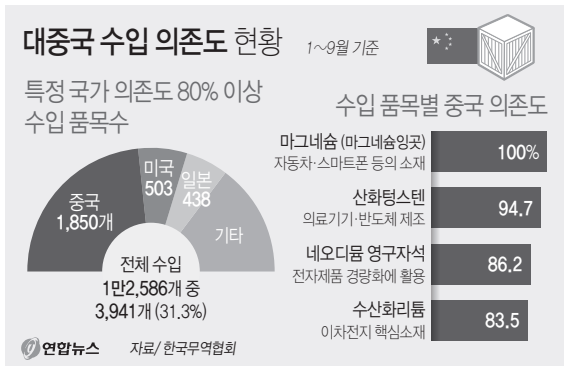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1~9월 기준 한국 수입 품목 1만2천586개 가운데 요소처럼 특정국에 8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3천941개에 달했다. 이 중 중국 수입 비율이 80%를 넘는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생산기지 해외서 자국으로...코로나가 불붙인 공급망 재편 경쟁

공급망 이슈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의 '경제 안보'로 확대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신(新)냉전이 펼쳐지면서 반도체 영역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생산거점의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망에 구멍이 뚫리고 여기에 물류난까지 겹쳐 비용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

이에 따라 해외로 옮긴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나 자국에서 가까운 나라로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움직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강해졌다.

그러나 반도체 자립을 둘러싼 G2(미국·중국)의 경쟁에서 보듯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은 노동 비용 증가와 교역의 지역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은 국제 공급망의 왜곡으로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수급 등이 차질을 빚으며 주요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자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내놓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산 물품 구매 의무 강화, 미 공급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을 하고 세계 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본국 회귀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약 62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 반도체 회사 인텔은 2022년 1월 미 오하이오 주에 200억 달러(약 23조9천억원)를 들여 첨단 반도체 생산·개발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미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향후 10년간 미국

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반도체 연구·생산시설 건설에 1천500억 달러(약 17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2021년 10월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반도체에 수십 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각국의 자국 위주 공급망 재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받는 투자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1월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부지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결정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 감면, 보조금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공급망 대란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면서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2022년 우리나라 수출이 다소 둔화하겠지만 기존의 성장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공급망 충격에 따른 생산 차질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이 꼽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장기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기업 특성상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내 임직원 땅 투기 논란... 들끓은 부동산 민심

■ 개요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에 나섰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집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투기 의혹은 추후 경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태로 내는 '조직 해체론'이 부상하는 등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낙마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 “보상 업무 맡겨놔더니 투기를...” 정부 합동조사단 꾸려 전수조사

내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보를 받고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무작위 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토지 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H는 즉시 관련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전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여론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3월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중앙·지방 공무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중간발표를 통해 출범 후 한 달간 총 178건·746명을 내사·수사해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책임론’ 분출…국토부 장관 낙마, LH 사장엔 국제 청장 출신 대응

경찰 수사와 각종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기 행태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신도시 예정지 주변 토지를 여러 명이 쪼개서 사들이고, 매입 대금 대부분은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로 충당하는 행태, 추후 토지수용 뒤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희귀수종을 촘촘하게 심는 행위 등 일반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행태가 드러났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LH의 직원들이 전문성을 악용해 땅 투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LH 사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직행한 변창흠 장관은 LH 투기 의혹 사태의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 만에 사퇴했다.

10월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던 LH 직원이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10월 18일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담당자로 기인한 이 개발 사업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입에 나섰으며 해당 토지는 5년 사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이 4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LH ‘수술대’에…고강도 구조 개혁·조직 개편 압박

LH는 안팎에서 고강도 구조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를 이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정부는 6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 혁신방안’ 주요 내용

주요 업무 및 기능		이전 기관 및 개편안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계획 등)	회수 →	국토교통부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및 안전영향 평가	이관 →	건설기술연구원
LH 기능 수행에 비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	이관 →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부동산원
신규 해외투자 컨설팅	이관 →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이관 →	부동산 금융사업 수행 민간기업 활용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 구역사업, 새마을사업 등	이양 →	각 지자체
정부간 협력사업(G2G) 외 신규 해외투자 사업	→	중 단
집단에너지 사업	→	폐 지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이해충돌 방지 방안

- 1단계 위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약 1천명 감축
- 2단계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으로 1천명 이상 추가 감축 (완료 시 현재 1만 명 수준인 인력의 20% 이상 감축 전망)

- 취업제한 대상자 현재 임원 7명 →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익계약 제한
- 설계공모·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 배제
-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내의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부로 회수하고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권한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는 등의 경영관리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로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다만, 내의 힘을 빼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조직 개편안은 결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내의 주거복지 부문을 모(母)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子)법인으로 수직분리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국회·전문가 등이 신중론을 펴면서 유보됐다.

공청회 등에서 전문가들은 악화된 여론에 밀려 '조직 해체' 등 중요한 결정을 성급히 내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주택 공급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후 '대장동 사태'로 인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막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내 조직개편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초유의 입시 일정 연기로 이어진 '수능 출제 오류'

■ 생명과학II '개체수가 음수' 오류...소송 나선 수험생들

2021년 11월 18일 전국 수험생 44만8천여 명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직후부터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항은 집단유전학을 다룬 문제다. 문항은 제시문과 보기로 구성돼 있는데 제시문에서는 집단 I과 II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된다고 돼 있다.

집단 I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 II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된다. 생물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될 수 없기에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이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평가원은 11월 29일 "관련 분야 학회들과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라며 정답을 확정했다.

그러나 생명과학II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은 12월 10일 서울 행정법원에 이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 이의심사 부실 논란...사상 초유 '빈칸 성적표'와 대입 일정 연기

법원은 먼저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둔 12월 9일, 본안 소송의 선고까지 해당 문항의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생명과학II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2월 10일 성적이 통지됐지만, 생명과학II 응시생 6천515명(1.5%)에 대해서는 생명과학II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사상 초유의 '빈칸'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학	생명과학II	-
	/	
	/	
	/	-

(성적 증명 등)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2월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은 성적표에 생명과학II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수능 정답이 유예되면서 대입 수시전형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의심사 과정이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졌다.

평가원이 이의 심사 중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으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무시된 점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명과학II가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한 과목인데도 자문 학회 3곳 중 전문 학회는 1곳뿐이었다.

'해당 문항이 오류가 맞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송 과정에 잇따라 나왔다. 집단유전학 분야의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Bing 석좌교수는 12월 11일 트위터에 이 문항에 '수학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에 앞서 서울대학교 유전체의학연구소장인 김종일 의과대학 교수도 "제시문에 오류가 있음이 명확하다"라고 밝혔다.